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간의
관계 연구

-2010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2016 년 2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강 세 진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간의 관계 연구

-2010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수 영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 년 4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강 세 진

강세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 년 6 월

위 원 장 _____ 구 민 교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김 봉 환 _____ (인)

위 원 _____ 이 수 영 _____ (인)

국문초록

현대 우리 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큰 기조 아래, 참여 민주주의의 강조에 따라 다양한 시민참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 내에서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민들이 현 실정법을 어기고서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고취하고자 노력해야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의 참 의미라 할 만하다.

법률이나 정책이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으며, 최후 수단으로 시민불복종과 같은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민불복종과 같은 비제도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회에서는 정부가 비제도적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비교적 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믿는, 즉 정부신뢰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민불복종(비제도적 참여와 유사한 개념)과 정부신뢰에 관해 법철학 위주의 질적 연구와 시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를 통해 다방면으로 연구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가 정(+)의 관계라고 분석되는 반면 대다수의 양적 연구에서는 음(-)의 관계라고 분석하였다. 같은 주제로도 분석 결과가 크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은 철학으로서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세부 개념들과 시민이 인식하고 있는 그것들 간에 아직 괴리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중에서 비제도적 참여와 정부신뢰가 정(+)의 관계라고 논의한 선행연구들의 맥락을 기본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비제도적 참여가 아닌 시민불복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시민불복종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시민일수록 정부를 더 신뢰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설문조사 데

이더를 활용하여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간의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 및 가설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설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에 해당하는 문항과 시민불복종 경험 여부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와 음(-)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철학적 및 논리적으로 논의되는 정(+)¹의 관계가 이제는 시민인식에서도 도출될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인식이 바뀌기에는 10여 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거나 혹은 대한민국 국민의 성향이 확고해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가 정(+)¹의 관계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지만,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다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의미하는 바는 같으나 학문 분야마다 다르게 쓰이는 용어를 통일 및 통합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행정학에서 비제도적 시민참여로 명명되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법학 및 철학 용어를 도입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제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추후 시민들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부신뢰를 예측 및 정책을 집행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시민불복종, 비제도적 참여, 정부신뢰, 대의 민주주의

학 번 : 2012 - 21971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	5
제 2 절 시민불복종에 관한 논의	7
1. 개념에 대한 논의	7
2.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	12
3. 비관습적 시민참여와의 관계	15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9
제1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설정	19
1. 본 연구에서의 정부신뢰와 시민불복종 조작적 정의	20
2.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설정	24
3.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 구성	31
제2절 분석방법	32
제 4 장 분석결과	33
제1절 기술통계	33
제2절 문항 신뢰도 및 타당도	36
1. 시민불복종 문항 신뢰도 및 타당도	36
2. 정부신뢰 문항 신뢰도 및 타당도	39

제3절 정부신뢰와 시민불복종의 관계	43
1.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43
(1) 정부신뢰 값 합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43
(2) 정부 청렴성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47
(3) 정부 도덕성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48
(4) 정부 정직성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50
(5) 정부 공정성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51
(6) 정부 공익성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52
(7) 정치인 신뢰도와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53
2. 결과요약	55
3. 결과해석	57
제 5 장 결론	58
참 고 문 헌	60
Abstract	63

표 목 차

[표1] 지병근(2013) 연구 요약	11
[표2] 시민참여 유형에 대한 개념적 도표	14
[표3] 선행연구에서의 정부신뢰 정의	22
[표4] 분석 변수 및 척도	31
[표5] 기술통계량	34
[표6] 시민불복종 문항 신뢰도 통계량	37
[표7] 시민불복종 문항 기초 통계량	37
[표8] 시민불복종 문항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38
[표9] 시민불복종 문항 공통성	39
[표10] 정부신뢰 문항 신뢰도 통계량	40
[표11] 정부신뢰 문항 기초 통계량	40
[표12] 정부신뢰 문항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41
[표13] 정부신뢰 문항 공통성	41
[표14] 정부신뢰와 시민불복종의 상관관계	44
[표15] 정부신뢰(문항 값 합)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공	45
[표16]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응답 값 합) 회귀분석 결과	46
[표17] 정부청렴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공	47
[표18] 시민불복종과 정부청렴성 회귀분석 결과	48
[표19] 정부 도덕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공	49
[표20] 시민불복종과 정부도덕성 회귀분석 결과	49
[표21] 정부정직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공	50
[표22] 시민불복종과 정부 정직성 회귀분석 결과	50
[표23] 정부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공	51
[표24] 시민불복종과 정부공정성 회귀분석 결과	51
[표25] 정부공익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공	52
[표26] 시민불복종과 정부공익성 회귀분석 결과	53
[표27] 정치인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공	54
[표28] 시민불복종과 정치인 신뢰도 회귀분석 결과	54

그 립 목 차

[그림1] 대표가설 및 가설1~6 모형	24
[그림2] 정부신뢰 6개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모형	2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현대 사회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국가 전반에 대한 법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정책이 좀 더 올바르고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이론과 체험을 통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겼으며, 그동안 행정학계에서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의 구성요소 및 분류와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시민이 정부를 신뢰할수록 정책의 의도하는 정책목표 및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데에도 많은 논의와 연구결과들이 있었다. 즉,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이 두 가지(시민참여와 정부신뢰)의 필요성은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4.16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나타나는 유가족 및 많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며 이에 대해 질문이 생겼다. 4.16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및 4.16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시, 국회의원들이 만든 위원 구성에 적극 반대하며 총 17명의 위원 중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위원회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쟁지

않은 기간 동안 그 의지를 관철하였다.

국민의 입장에서서는 대리인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조사단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입법에 대해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에 만족하지 못하자 순응하지 않고 불복종하여 시위 등의 적극적 반대 운동을 통하는 등 법 밖에서 법을 수정, 다시 법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참여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정책에 반대할 때 정책이나 정부, 정권에 대한 항의(voice)도 포함된다. 또한 이 항의는 현행법이나 현 제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항의와 현행법과 현 제도 밖에서 하는 항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현행법과 제도 밖에서 하는 항의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며, 대의의 시민참여에 속하는 개념이다(김혜정, 2010).

선행 연구들에서는 시민참여와 정부신뢰의 관계까지는 탐구하였으나, 그 중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탐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았을 때, 첫째로 특정한 시민참여인 시민불복종에 대한 접근보다 전반적인 시민참여가 정부신뢰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될 필요성이 컸으며, 둘째로 시민불복종은 법철학적 개념으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정학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셋째로 시민불복종은 현행법 내에서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법외 항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행정학에서의 연구대상이 갖는 법과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서의 유가족을 비롯

한 여러 사람들의 반대 및 수정 요구 운동, 공무원노조 운동을 비롯해서 최근 예상치 못한 범외 항의라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운동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법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렇게 되어가는 현실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원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먼저 행정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논의의 일부로 이번 연구에서는 과거 시민참여와 정부신뢰와의 관계 연구의 연장선에서 시민참여 중 시민불복종에 해당하는 것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시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시민 개인이 갖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인식’이 시민 개인이 갖는 ‘정부신뢰’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상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 및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으나, 시간적·물리적 어려움이 있어 기존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The Korea Democracy Barometer, KDB)의 ‘2010년 정치·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 제도와 경제체제 등 정치 및 경제 문제 전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진행된 설문조사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설문은 주로 ‘매우 그렇

다’부터 ‘전혀 아니다’까지 4점 또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조사 자료를 정리한 SPSS 원자료에는 ‘모르겠다(8점)’와 ‘무응답(9점)’까지 설계되어있어 다른 기관에서 조사된 설문자료보다도 더 자세한 설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총 1004명의 유의미한 대한민국 국민 표본값을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는 총 성별, 나이, 직업, 소득 등 응답자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외에 경제 4문항, 정치 10문항, 정부 3문항, 민주주의 15문항, 정치참여 23문항, 이념적 성향 2문항, 시민 사회 6문항, 인터넷·사회연결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에 따라서는 하나의 문항 안에 여러 세부 문항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서 시민불복종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항과 정부신뢰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항 및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설문내용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신뢰’에 대한 각각의 논의부터 시작하게 된다. 먼저 신뢰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rber(1983)는 신뢰가 ‘행위자들 상호간에 가지는 기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기대가 있지 않을 때에는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뢰의 의미 중 ‘기술적으로 유능한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수탁(fiduciary)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대’의 두 가지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와 다르게 Hardin(1998)은 합리적 선택 관점으로 신뢰를 보았을 때, 신뢰는 피포된 이익(encapsulated interest)의 표현이며 이는 진실, 약속 준수, 공정, 연대 등 신뢰의 규범적 및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였다(박종민·배정현, 2011, p. 117-142에서 재인용).

이러한 Barber(1983)와 Hardin(1998)의 신뢰개념으로부터 정부 신뢰 개념을 도출한다면, 정부신뢰는 시민들이 가지는 정부에 대한 역할 기대 및 유능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것에 대한 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박종민·배정현, 2011, p. 117-142에서 재인용).

정부신뢰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요인으로는 정치문화나 근대화와 같은 장기적 요인과 국가상황, 정부에 대한 언론 보도 등 단기적 요인을 들 수 있다(박종민·배정현,

2011, p. 117-142에서 재인용).

내부요인으로는 주로 정부, 정책, 시민의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의 특성과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특성에서 정부신뢰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연구, 정책 자체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행태 및 대통령 등의 정권으로부터 시민의 정부신뢰 크기에 영향을 준다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박종민·배정현, 2011; 서문기, 2001; 이양수, 2008; 이운수, 2013).

또한 ‘정부신뢰’에서의 ‘정부’를 정권인지, 행정부인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인지, 혹은 국회인지 그 조작적 정의와 범위를 달리하여 논의된 다수의 연구가 있으며, 또한 신뢰에 집중하여 신뢰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뢰의 수준 등에 대해 다차원적 논의되거나(원숙연, 2001), 동아시아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생긴 신뢰의 개념적 차이에 집중하여 논의된 것도 있었다(정하영, 2006).

특히 정하영(2006)은 신뢰에 대한 논의들이 유럽이나 미국 관점에서 시작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신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정하영(2006)은 Ring & Van de Ven(1992)이 신뢰의 속성으로 도덕적 진실성(Moral integrity), 선의(Goodwill)로 규정하고, Mayer, Davis, & Schoorman(1995)은 능력, 진실성, 호의(Benevolence)로 보았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존 논의와 인지, 감정, 행태적 차원 등 다차원적 관점을 종합하여 동아시아에 맞는 신뢰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정하영(2006)은 동아시아에서의 신뢰란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뢰대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근거해 자신의 ‘취약성’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자발적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제2절 시민불복종에 관한 논의

1. 개념에 대한 논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철학에서 철학적 및 개념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행정학에서 지금까지 시민불복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은 거의 없지만 시민불복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로 ‘비관습적 참여’로 보고 시민참여의 하나로 분류하여 연구된 사례는 상당히 많다.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 및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사회적 자본 중 하나인 시민참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되거나 거버넌스 시각에서 시민참여의 동기 및 중요성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신뢰에 대해서도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나 정부신뢰가 정책순응 및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부신뢰를 높이는 데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 행정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관점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법철학에서의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란, 특정 법률이나 정책이 자연법적 시민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즉 옳지 않은 방향의 정책이라는 판단이 있을 때 정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는 궁극적인 자연법적 이념이나 권리를 찾기 위해 주로 현 법률 및 제도를 초월하여 법률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묻는다. 이 용어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1849)의 ‘시민불복종의 의무(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라는 논문에서 도입되었으며 노예제를 지원하는 정부에 납세거부 행위를 통해 직접 보여주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의 평화적인 방법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 행위가 있었으며, 후에 존 롤즈(John Rawls)에 의해 개념이 정리되었다.

학문적으로는 법철학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주로 시민불복종 개념에 대한 논의, 그리고 불복종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 등이었다. 또한 시민불복종과는 조금 다르지만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한 실험 연구도 많았다.

법철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롤즈(Rawls)와 같은 학자들이 정립한 시민불복종 개념에 대한 고찰이 있으며, 그 중에는 이 개념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행위 중 하나이며 이는 사회 협동체의 원칙을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공유진, 2012).

이상돈(2010)은 시민불복종운동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한 형태라고 했다.¹⁾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시민운동은 독재정권에서의 운동과 다르게 기존 체제의 정당성을 승인하면서 한계적 상황에 다다른 민주성을 보안하는 중요한 기능임을 밝히고 있다(이상돈, 2010, p. 149-150). 그리고 시민불복종과 같은 시민운동을 하버마스(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이 이론을 통해 설명하면서 법인식 패러다임이 ‘주체-객체’ 인식모델의 구조에서 상호주관적 인식모델로 바꾸어 나아가야한다는 것과 법실증주의적 사고에서는 입법자(주체)가 실정법 텍스트(객체)에

1) 그 외에 2가지가 더 있는데 인권운동과 공익소송운동이다.

입력한 실천적 명령이 완전무결한 법규범이 되었던 반면, 자연법적 사고에서는 개인(주체)이 홀로 인식한(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객체)이 배타적인 법규범이 된다는 것을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이상돈, 2010, p. 158-159). 입법자가 만든 실정법을 완전무결한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것을 법인식의 ‘엘리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엘리트주의는 정당성을 합법성으로 환원 및 합법성을 정당성의 이름으로 해체하는 오류를 낳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을 완전무결하다고 보지 않고 법을 따라야 하는 시민들도 개인이 생각했을 때 올바른 기준, 즉 자연법에 따라 실정법을 평가 및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통해 실정에 맞게 수정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법철학에서 시민불복종 연구를 할 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법실증주의, 소로우(Thoreau)의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하버마스(Habermas)의 대화이론 등이 있다.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지, 법실증주의만으로는 어떤 점을 간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소로우의 시민불복종 개념이 중요해졌으며, 하버마스가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방법의 하나로 시민불복종을 채택했으며, 왜 실정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공론의 장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자연법에 의한 시민불복종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된 사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본 연구와 연관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시민의 인식

법철학적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이런 시민불복종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사회과학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사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조사(Korea Democracy Barometer Survey, 1994, 1996, 1997, 1998, 1999, 2001, 2004, 2010)가 꾸준히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민주주의 인식이 어떤지(지병근, 2013),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Shin & Lee, 2006) 등이 있다.

민주화에 대해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까닭은 민주주의체제를 시민들이 어떻게 내면화하느냐에 따라 다른 정치문화를 도출해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연구는 동서양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많은 국가간 민주주의체제 비교 분석 연구들은 각 국가 시민들이 민주주의체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표준화된 비교 및 결과도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지병근, 2013, p. 31-32).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시기나 국가에 따라 다양한데, 지병근(2013, p. 32)은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계몽을 통해 시민의 생존권, 정치적 자유 보장, 평등권을 실현하는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즉 민주주의가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기 보다는 빈곤탈피, 사회적 불안정 극복을 위한 선택적 기제로부터 시작되고 계속해서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로 수용 및 인식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병근(2013)의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신생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이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를 충분히 깨닫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바른 법과 제도가 운영되고 계속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되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외재적 가치로 인식해 온 민주주의를 내재적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몽이나 학습을 통해 인식이 바람직하게 전환된다면 시민 스스로 어떤 법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공론의 장에서의 대화를 통해 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그 법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고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병근(2013)의 연구 내용 중에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단순 합산한 자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시민불복종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당 탐구는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KDB)라는 곳에서 주최하고 갤럽에서 조사한 2010년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한국인들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시민불복종에 대한 지지수준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1 지병근(2013) 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연도)	지병근(2013)
연구 내용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인식
연구 결과	한국인은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발전을 중시, 불평등 완화 중시의 경향을 보이며, 보수적일수록 경제발전 우선, 행정부 중심 권력배분 선호, 자유 지지 성향 약화 보임.

시민불복종 포함영역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단순 합산한 자유
시민불복종 연구 결과	이념적으로 보수일수록 자유에 대한 지지수준이 감소
시민불복종 연구 방법	카이제곱검정
분석자료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KDB) 2010 년 여론조사자료

행정·정책학에서의 시민불복종

행정학계에서도 ‘시위’나 ‘집회’ 행위나 ‘비관습적 시민참여’라는 주제로 시민불복종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다. 그러나 행정학에서 시민불복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 개념 자체보다는 주로 집회나 정책에 대한 항의 등 실제 상황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 행정학에서도 법철학 등 다른 학문과의 융합 등 자유로운 연구 교류를 위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과 용어 정리 등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시민참여 동기, 그 참여의 수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었으며(김혜정, 2010), 조금 더 자세하게 넓은 의미의 시민참여를 들여다보면, 참여의 한 유형으로 불복종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학보다는 시민불복종의 경우 철학이나 법학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민불복종의 개념이 법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행정학에서는 주로

불복종과 같은 개념보다는 시민참여 중 일부로 집회참여나 정책에 대한 항의 등 실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다(최태현, 2014, p. 239).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다차원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민참여가 사회적 자본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송경재, 2013), 개인이 참여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시민참여 유형도 다른지(최태현, 2014)에 대한 논의가 현 논의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 진다.

송경재(2013)는 퍼트남이 말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신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양한 내용이 있었으나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촛불시위나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비관습적 시민참여’라고 조작적 정의하였을 때, 타인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낮을수록, 비관습적 시민참여가 활발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관습적 참여모델과 반대되는 결과로, 정부신뢰와 비관습적 시민참여가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비관습적 시민참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시민참여를 관습적인(conventional)것과 비관습적인(nonconventional) 것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관습적인 시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 정치캠페인 활동, 정치인 접촉 등 일반적인 정치제도나 정책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주창범, 2010, p. 364에서 재인용).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관습적 시민참여만으로는, 즉 정책 및 정치과정 관련 제도만을 통해서도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이 제도적 장(場)에서 벗어나 항의성 정치(politics of protest)

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시위, 파업, 농성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제도적으로 갖추어진 시민참여 방법이 시민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렴 및 매개하는 기능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이와 같은 항의성 정치의 시민참여가 나타나는데, 이를 비관습적 시민참여라고도 부른다(주창범, 2010, p. 364). 관습적 시민참여와 비관습적 시민참여를 다음 표와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으며, 비관습적 참여에서도 비교적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인지 여부에 따라 비분열적 방법(non-disruptive tactics)과 분열적 방법(disruptive tactics)으로 나누기도 한다.

표 2 시민참여 유형에 대한 개념적 도표

관습적 참여	비관습적 참여	
	비분열적방법	분열적방법
투표	청원운동	비합법적시위
정치캠페인	소비자불매운동	폭동
지역조직화	합법적시위	파업
정치인접촉	선언문낭독	농성
이익집단활동및로비		

(주창범, 2010, p. 365)

비관습적 참여가 보통의 경우 제도적으로 정당성(legitimacy)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를 통한 관습적 참여가 줄어들었으며,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전통적 대의제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숙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의사소통 및 가상조직 등을 구성하여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에 익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

관습적 참여를 관습적 참여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비중이 매우 커지고 정치 및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정당성이 생기고 있다. 물론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제도적 정당성은 아니지만 사회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당연시 되는(socially comprehensible and taken-for-granted)’ 방식, 즉 인지적 정당성(cognitive legitimacy)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주창범, 2010, p. 365에서 재인용).

3. 비관습적 시민참여와의 관계

시민불복종도 시민참여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김혜정, 2010) 사회적 자본이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다시 이는 신뢰 및 호혜성의 규범이 되어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이론적 원리에서 ‘시민참여’의 자리에 ‘시민불복종’을 대입해보면,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 또한 상호 증진효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반대로는 시민불복종도 낮다는 말은 정부신뢰가 낮다는 것이기도 하다. 특별히 불복종 행동을 한다고 해도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당연히 시민은 불복종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순응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그렇지 않은 사례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들이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하며, 특별히 완전히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 활동까지도 하게 만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행연구 중 본 연구자와 가장 비슷한 질문으로 시작한 연구로,

석사논문으로 쓰인 ‘시민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9)’가 있다. 이 논문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여러 가지 시민참여 유형에 따라 정부신뢰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나타나지는 않았고, 특히 본 연구자가 관심 있는 집회 및 정책 반대 등이 속하는 유형의 시민참여자들도 정부신뢰와의 관계가 음의 관계이기는 하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시민불복종에 해당하는 내용과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더 면밀히 살펴보면 유의미한 관계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시민참여, 정부신뢰 각각에 대한 연구 및 시민참여와 정부신뢰의 관계까지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그 중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탐구는 많지 않다. 정책순응이나 정책목표달성에 시민의 정부신뢰가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에서 극단적인 형태의 시민참여인 시민불복종과의 관계도 논의되어야 정부신뢰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론적으로 대의의 시민참여와 정부신뢰가 정(+)의 관계(김혜정, 2010)라는 내용을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의 여론조사자료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 관계 가정에서 출발한 여러 연구들이 시위나 집회 같은 시민불복종에 해당하는 시민참여는 정부신뢰와 부(-)의 관계이거나 관계가 없다는 결과와 함께 결론에서는 가정을 기각했다(이승원, 2009; 송경

재, 2013). 하지만 반대로 김대욱·이승중(2008)의 독립변수를 정부신뢰로, 종속변수를 비제도적 참여로 나누어 논의한 결과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시위 및 집회와 같은 비제도적 참여도 높다는 정(+)²⁾의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²⁾도 있었으며,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비제도적 참여를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바꾸어 분석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이번 연구가 의미가 있다. 아직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를 정(+)³⁾이나 부(-)의 관계로 단정 짓기에는 이와 같은 연구가 충분히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기존 연구들과 설문조사 자료를 달리하여 가정을 다시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시민불복종 인식, 행동 의사, 실제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시민불복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민불복종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시민불복종을 한 적이 있다는 것³⁾이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의 측정의 한계로 인해 이 세부적 관계에 대해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할 자료(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2010)는 기존 설문조사들에 비해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 구성이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의미있는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2)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논문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투표와 같은 제도적 참여에 대한 효과와 집회 및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 참여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각각이 독립변수인 정부신뢰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되었다.

3) ‘의사’와 ‘행동’간에 연관성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의사’는 설문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인데 반해 ‘행동’ 여부는 설문조사 자료만으로는 실제 미래에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로 ‘행동’에 대한 변수는 설문 중 ‘과거 시민불복종 행동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대체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넷째, 행정학에서는 법철학에서 논의되는 시민불복종이 주로 ‘비제도적 시민참여’나 ‘비관습적 시민참여’, 혹은 시민불복종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인 ‘시위’나 ‘집회’로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이 모두가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다. 뜻하는 개념이 같다면, 학문간 교류 및 융합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의를 통해 크게는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를 검증하고, 작게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필요성 인식, 행동할 의사, 행동 여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구하는 기회 및 행정학에서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용어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1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설정

선행연구는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논의한 것 보다는 주로 정부신뢰와 시민참여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예를 들면, 행정부에 대해 신뢰하고 있을수록 비제도적 시민참여(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고 보는 연구가 있으며(김대욱·이승중, 2008), 이와 비슷하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집회·시위와 같은 결사체 참여를 비롯한 정치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 및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연구(장수찬, 2002)도 있다. 하지만 장수찬(2002)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사용한 1997년 세계가치조사 데이터 상에서 우리나라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과와 반대라고 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비제도적 시민참여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주제로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신뢰와 시민불복종이 정(+)의 관계에 있다는 내용으로 가설을 세우고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라는 국민인식조사 데이터를 통해 가설검정을 하고자 한다. 또한 2010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수찬(2002)이 사용한 1997년 데이터와 큰 변화가 있는지, 즉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은 대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 즉 시민참여의 큰 범주 안에 속하는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가

정(+이라는 범철학적 질적 연구를 따라 가설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양적 연구로도 증명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10년 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시민인식 상에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에 대해서 정(+의 관계가 생겨났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의 특성에 따른 정부신뢰 연구와 같이, 시민참여와 정부신뢰 큰 범주간의 관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 중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하며, 연구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가설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의 정부신뢰와 시민불복종 조작적 정의

정부신뢰의 경우 행정학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정부신뢰의 개념에 대한 유형 및 분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시민불복종의 경우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의 의미를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알기 위해 조작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신뢰

앞서 정부신뢰 개념을 논의하면서 ‘정부’와 ‘신뢰’의 다차원적 개념과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정권인지, 행정부인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인지, 또는 국회를 의미하는 지에 따라(원숙연, 2001), 그리고 ‘신뢰’의 수준이 보통 서구에서부터 시작된 계약에 의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기대, 즉 ‘기술적으로 유능한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수탁(fiduciary)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대’도 있고(Barber, 1983), 동아시아 역사·문화로부터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뢰 대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근거해 취약성까지도 기꺼이 수용하려는 자발적 의지(정하영, 2006)도 있다. 정부와 신뢰에 관한 개념은 그 차원과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 각 연구에서 정부신뢰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한다.

정부신뢰를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 차원으로 간주했을 때 지지 대상을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 통치체제(regime), 당국(authorities)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연구(Easton, 1965)도 있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 즉 통치제도나 집권당국 모두에 대한 정향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정부신뢰인 ‘전통적 정부신뢰’와 입법부와 행정부 대상 제도에 대한 신뢰인 ‘정부 제도 신뢰’로 나누어 연구한 사례(박종민·배정현, 2011, p. 124)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신뢰의 개념이 박종민·배정현(2011)이 논의한 ‘전통적 정부신뢰’와 일치한다고 보아 해당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 및 사용한 측정지표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정권이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아닌 일반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 즉 전통적 정부신뢰로 정의

한다.

표 3 선행연구에서의 정부신뢰 정의

연구자	연구 연도	정부신뢰 정의
Citrin and Muste	1999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과 의지
Chanley, Rudolph and Rahn	2001	정부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신탁한 일을 유능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
손호중 외	2005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의 일종
박종민·배정현	2011	전통적 정부신뢰(통치제도 및 집권당국에 대한 신뢰)와 정부제도신뢰(입법부와 행정부의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

(박종민·배정현, 2011에서 재정리)

정부신뢰를 어떤 것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시간 대학의 사회조사센터(SRC)에서 개발한 측정항목인데(박정훈, 2008, p. 97), 그 질문내용은 첫째, 정부가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지, 둘째, 누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지, 셋째, 세금을 얼마나 낭비한다고 생각하는지, 넷째, 정부공직자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섯째, 정부 공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이며(박종민·배정현, 2007, p. 498) 이들 문항이 정부신뢰를 잘 측정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지만 아직까지 측정항목으로 꾸준히 사용 및 참고되고 있다. 그 밖에도 정부신뢰를 정부 능력 및 윤리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측정항목에 수정 및 추가하기도 하고

(Barber, 1985), 척도가 2-3점 구성이었던 것을 5점 척도로 변형 사용하기도 하고(이시원, 1994), 피해감수의지, 믿음, 순응적 태도 3개 문항과 전문적 지식, 대응, 절약, 능률 4개 항목 및 도덕, 정직, 청렴의 3개 항목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오경민·박홍식, 2002). 그 밖에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데 단일 문항 7점 척도로 측정하거나(현승숙·이승중, 2007), 16개 문항 중에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정의실현, 다수이익, 업무공정성, 보건예산 효율성, 법 준수, 특정집단 기대 부응 6개 문항을 선정하거나(양건모, 2007), 미시간 대학의 5개 문항과 Barber(1985)의 문항 등을 참고하여 권한의 신중한 사용, 국민 요구에 민감한 반응성, 예산 효율적 사용, 능률성, 전문성, 도덕성 6개 문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박정훈, 2008). 이승원(2009, p. 9)은 오경민·박홍식(2002)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정부신뢰 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능적 기대 4개 항목, 즉 전문적 지식, 대응성, 절약, 능률, 윤리적 기대 3개 항목, 즉 도덕성, 정직, 청렴으로 정부신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부신뢰와 개념을 같이하는 다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 자료로 선정한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설문데이터에 해당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 항목으로 총 6가지로 구성하였다. 세부항목의 내용은 정부의 청렴성(1개 문항), 정부의 도덕성(1개 문항), 정부의 정직성(1개 문항), 정부의 공정성(3개 문항), 정부의 공익성(2개 문항), 정치인 신뢰도(1개 문항)이다.

시민불복종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시민의 권리를 이해하고 있어 정부 정책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집회나 시위를 통해 관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과거 그러한 시민불복종 행동을 한 경험이 있거나 만약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 행동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설정

대표가설: 시민불복종 인식이 높으면 정부신뢰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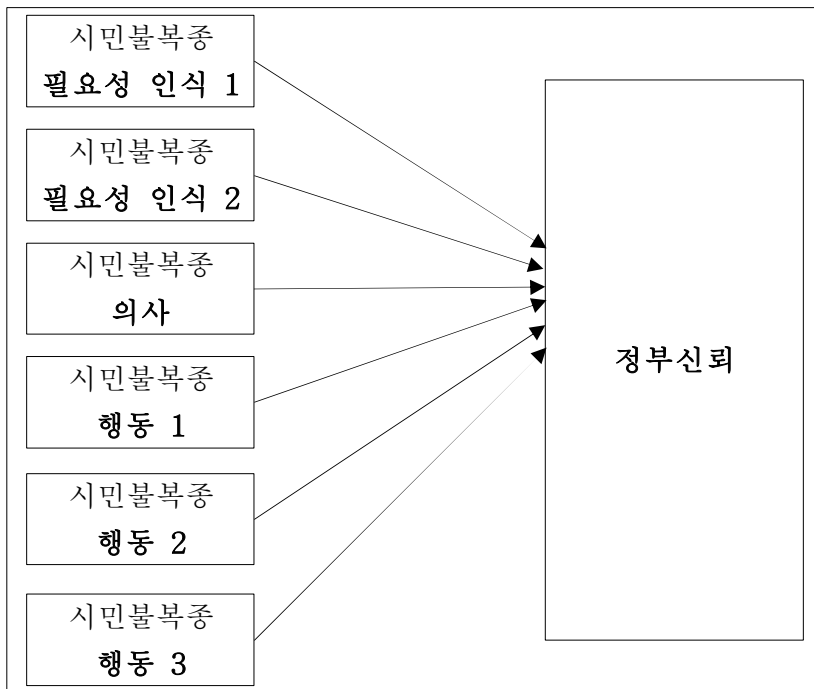


그림 1 대표가설 및 가설1~6 모형

시민불복종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시민일수록 정부신뢰도 또한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대표 가설이다. 시민의 시민불복종 인식을 알 수 있는 것으로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설문자료에서 총 6개의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민불복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행동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시민불복종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자세한 설문 내용은 가설 1~6에 대한 설명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정부신뢰는 6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에서 총 9개의 문항으로 각 설문 응답자의 9개의 문항 응답 값의 합을 ‘정부신뢰 응답 값 합’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시민불복종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더불어 추가적으로 정부신뢰 세부 요인 6개 각각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하여 정부신뢰 값 합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지 분석한다.

가설1: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1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질서유지를 위해 집회나 시위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일 수록 정부를 신뢰한다.)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1 설문문항 자체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가?”이다. 이 문항은 민주주의 요소 중 어떤 것을 더 중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문제로, 가설을 “질서유지를 위해 집회나 시위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일 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가설2: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²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당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² 설문문항 자체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당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이다. 부당한 정부정책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비판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제도 내·외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시민불복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당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가설3: 시민불복종 의사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현재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한다면 이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시민불복종 의사 설문문항 자체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한다면, 이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실 의사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이다. 가설3을 다시 말하면,

현재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한다면 이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는 것이다.

가설4: 시민불복종 행동 경험1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지난 1년 동안 불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시민불복종 경험1 설문문항 자체는 “지난 1년 동안 불법적인 시위에 참가했는가?”이다. 가설4를 다시 말하자면, 지난 1년 동안 불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는 것이다.

가설5: 시민불복종 행동 경험2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지난 1년 동안 탄원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시민불복종 행동 경험2 설문문항 자체는 “지난 1년 동안 탄원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가?”이다. 해당 문항만을 두고 보면 사적인 일을 위한 탄원서인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탄원서인지 구분이 어려우나, 설문지 전체 내용 상, 그리고 맥락 상 개인적인 탄원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정치행위에 대한 질문 범주 안에 있었으므로 설문 응답자에게도 혼란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다만, 탄원서가 시민불복종 행동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주창범(2010)에 의하면 청원운동, 소비자불매운동, 합법적시

위, 선언문낭독 등도 비제도적 시민참여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본 논의에서 다루는 시민불복종이 비제도적 시민참여와 내용을 같이하는 부분이므로 탄원서 서명도 시민불복종 행위로 간주하기로 한다.

가설5를 다시 말하면, 지난 1년 동안 탄원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는 것이다.

가설6: 시민불복종 행동 경험3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지난 1년 동안 합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

시민불복종 행동 경험3 설문문항 자체는 “지난 1년 동안 합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가?”이다. 가설5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주창범(2010)에 의해 합법적 시위도 비제도적 시민참여에 속하며 본 논의에서 다루는 시민불복종이 비제도적 시민참여와 내용을 같이하는 부분이므로 합법적인 시위를 시민불복종 행위로 간주하기로 한다.

가설6을 다시 말하면, 지난 1년 동안 합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신뢰가 높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 2는 정부신뢰 6개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모형이다. 각 모형은 가설 1~6에 속하는 세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설3에서 시민불복종 의사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할 때, 응답자의 정부신뢰 응답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해서 회귀분석하며 더불어 정부신뢰 6개 요인 각각을 종속변수로 보아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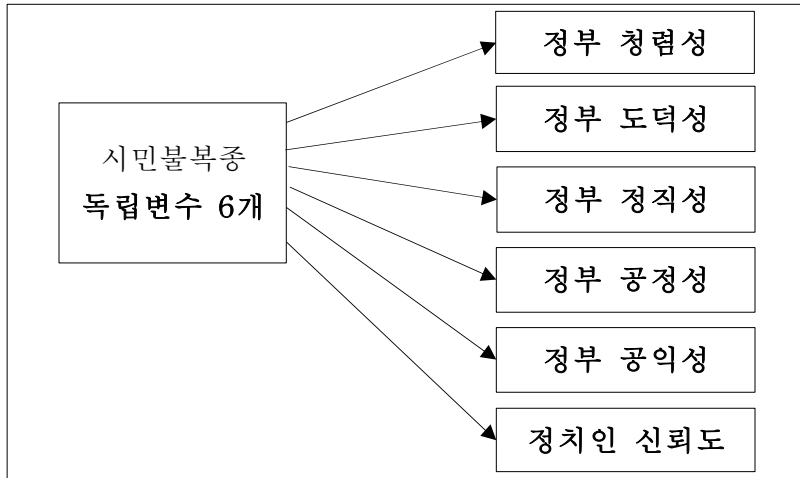


그림 2 정부신뢰 6개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모형

시민불복종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개인의 시민불복종 의사가 높을수록 정부신뢰 또한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존에 연구된 송경재(2013)의 연구결과와 완전 배치되는 가설이다. 송경재(2013)의 연구에서는 시위 및 집회 등의 비관습적 시민참여가 정부신뢰와 부(-)의 관계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을 더 정확히 알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라면 현행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신뢰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다시 한 번 다른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조사인 2010년 11월경 수집된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Korea Democracy Barometer) 여론조사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이 조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정부, 신뢰, 시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질문들에는 권력구조, 민주적 반응성, 정부구성의 원칙, 자유와 평등, 경제발전과 불평등 완화 등 민주주의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가치요소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묻고 있다(지병근, 2013: 39). 매년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회 실시되어 긴 기간 동안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KDB와 비슷하게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the New Democracy Barometer, the New Europe Barometer, the Latinobarometer, the Afrobarometer, the AsiaBarometer, the East Asia Barometer(Shin & Lee, 2006, p. 239에서 재인용)와 같은 인식조사는 각 나라에서 또 자세히 연구되었으며 각 나라간 비교도 가능하게 하는 인식조사도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각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당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나라별 민주주의 인식 비교도 가능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자료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조작한 ‘시민불복종’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질문과 조작한 ‘정부신뢰’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질문을 추출하여 해당 개념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 구성

표 4 분석 변수 및 척도

	변수	지표 (설문문항)	응답 및 척도
독립변수	시민불복중 필요성 인식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가	① 매우 필수 ② 약간 필수 ③ 별로 필수적이지 않음 ④ 전혀 필수적이지 않음 ----- ⑧ 모르겠다 ⑨ 무응답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당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 ~ 매우 중요하다(10점) 모르겠다: 98점 무응답: 99점
	시민불복중 의지 (역코딩)	현재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한다면, 이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실 의사 여부	① 매우 있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 ⑧ 모르겠다 ⑨ 무응답
	시민불복중 경험 여부 (역코딩)	지난 1년 동안 불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적 있음	① 했다 ② 하지 않았다 ----- ⑧ 모르겠다 ⑨ 무응답
		지난 1년 동안 탄원서에 서명한 적 있음	
		지난 1년 동안 합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적 있음	
종속변수	정부 청렴성	정부 주요 공직자 부패 정도	① 매우 부패했다 ② 다소 부패한 편이다 ③ 별로 부패하지 않았다 ④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 ----- ⑧ 모르겠다 ⑨ 무응답
	정부 도덕성	정부 공직자의 권력 남용 및 법 위반 정도	① 자주 그렇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 정직성	정부 공직자의 중요 정보를 국민에게 감춤 정도	

		다 ----- ⑧ 모르겠다 ⑨ 무응답
정부 공정성 (역코딩)	정부는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한다	① 매우 동의 ② 약간 동의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⑧ 모르겠다 ⑨ 무응답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법원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죄를 지으면 항상 처벌한다	
정부 공익성 (역코딩)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하고 있다	⑧ 모르겠다 ⑨ 무응답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정치인 신뢰도 (역코딩)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신뢰 정도	① 매우 신뢰 ② 약간 신뢰 ③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④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⑧ 모르겠다 ⑨ 무응답
통제변수	성별(남=1, 여=2), 나이, 학력(초졸이하=1, 중졸=2, 고졸=3, 전문대재학/ 졸=4, 4년제대학교 재학/졸업 이상=5), 소득(49만원 이하=1, 50만원~99만원 미만=2, 100만원 이상~149만원=3 등 50만원 단위, 1000 만원 이상=15)	

제2절 분석방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서열척도로 범주형 변수에 속한다. 이 경우 Pearson 상관계수, Spearman 상관계수를 구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규명하지는 못한다. 먼저 SPSS를 통해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하고, 관계가 있을 경우 심층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작을 통한 회귀분석을 같이 한다.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기술통계

정부신뢰 문항 값 합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회귀분석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활용한 데이터(N)의 크기는 882이다.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해서는, 9개 문항 값의 평균을 내지 않고 문항 값의 합으로 측정했으며, 합 평균은 17.82다.

단, 방향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역코딩의 경우, 척도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는데, 예를 들면 정부 청렴성 문항에서 응답 1번이 ‘정부 주요 공직자는 매우 부패했다’인데, 정부 공정성 문항 중 ‘정부는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문항의 응답 1번이 ‘매우 동의’이므로 두 정부신뢰 문항 간 긍정과 부정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다. 방향을 맞추기 위하여 정부 청렴성 문항의 긍정·부정 방향을 기준으로 정부 공정성, 정부 공익성, 정치인 신뢰도에 대한 응답 1점~4점을 방향을 바꿔 4점~1점 순으로 다시 매겼다.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에서는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문항의 척도를 기준으로 시민불복종 의지와 시민불복종 경험 여부 척도를 맞추어 역코딩하였다.

표 5 기술통계량

변 수		평균	표준편차	N
종속 변수	정부신뢰문항값합	17.82	4.37	882
독립 변수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2.65	.85	
		6.98	1.93	
	시민불복종 의지	2.52	.89	
	시민불복종 경험 여부	1.01	.08	
		1.06	.23	
	1.02	.13		
통제 변수	성별	1.51	.50	
	나이	44.28	14.27	
	학력	3.46	1.24	
	소득	6.54	2.57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첫 번째 독립변수의 경우, 시민불복종의 필요성 여부 중에서 첫 번째 문항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응답척도로 매우필수=1, 약간필수=2, 별로 필수적이지 않음=3, 전혀 필수적이지 않음=4가 있었으며 평균 2.65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적을 가졌더라도 비제도적인 집회와 시위는 질서유지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약간필수(2)와 별로 필수적이지 않음(3) 중간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별로 필수적이지 않다는 의견에 더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의 두 번째 문항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당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0부터 매우 중요하다=10까지 총 척도가 11개인 질문에 대하여 응답 평균 6.98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아, 첫 번째 질문에 비해 부당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질문의 질문이 ‘질서유지’나 ‘집회나 시위’의 요인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인데 설문 응답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차이가 큰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다.

시민불복종 의지

‘현재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한다면, 이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실 의사 여부’에 대한 문항에 역코딩 결과, 전혀 없다=1, 별로 없다=2, 약간 있다=3, 매우 있다=4의 값이 재할당되었으며 평균 2.52가 도출되었다. 즉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시민운동을 할 의사가 별로 없거나 약간 있다는 것인데, 그 정도가 아주 조금이지만 약간 있다는 데에 더 가깝다.

시민불복종 경험 여부

시민불복종의 첫 번째 문항인 ‘지난 1년 동안 불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역코딩 척도 1=하지 않았다, 2=했다를 기준으로, 평균 1.01 값이 도출되었다. 불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국민이 아주 소수이기도 하지만, 1년 동안이라는 기한을 두어 더 작은 비율만이 참여로 응답했을 것으로 본다.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 지난 1년이 아닌 ‘과거’라는 말로 교체하여 전생애 중 시민불복종 경험 여부로 바꾸어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시민불복종 경험 여부 질문인 ‘지난 1년 동안 탄원서에서명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06, ‘지난 1년 동안 합법적인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02로, 세 문항에서 모두 비슷

한 값이 나왔으며 이는 1년이라는 제한이 있어 해석의 어려움은 있으나,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시위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며 탄원서는 그나마 많이 했지만, 그 조차도 유의미하게 높지 않다.

통제 변수

통제변수는 성별, 나이, 학력, 소득으로 보았으며, 성별은 남자=1, 여자=2로, 응답자의 성비가 비슷하며, 나이는 평균 44세, 학력은 3.462로 응답척도(초졸이하=1, 중졸=2, 고졸=3, 전문대재학/졸=4, 4년제대학교 재학/졸업 이상=5)를 보면 설문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한 성인이거나 전문대학 재학 또는 졸업한 성인인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문항 신뢰도 및 타당도

1. 시민불복종 문항 신뢰도 및 타당도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사용하고 자 하는 문항들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를 확인해야한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에 반복적으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할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그 측정결과 간의 차이가 작아야 된다는 것으로, 주로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크롬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크롬바흐 알파는 시민불복종을 물어보는 문항 6개가 공유하는

분산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체 설문의 합이 갖는 분산을 구한 후 이 분산에서 개별 질문들의 분산을 빼 값(고길곤, 2014, p. 276-277)으로, 공유하는 분산이 크면 여러 개의 질문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시민불복종은 사용하기로 한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자료에서 총 6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1004개의 응답자중 유효한 응답자 897개의 응답만 유효하며 6개의 응답의 표준화된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0.49로, 신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0.6에는 이르지 못해 충분히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질문을 각기 하나의 개념인 ‘시민불복종 의사’로 묶지 않고 각 문항을 각기 다른 독립변수로 보기로 한다.

표 6 시민불복종 문항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239	.490	6

표 7 시민불복종 문항 기초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N
시민불복종 인식 1	2.66	.852	897
시민불복종 인식 2	6.99	1.94	
시민불복종 의지	2.51	.888	
시민불복종 경험 1	1.01	.082	
시민불복종 경험 2	1.06	.232	
시민불복종 경험 3	1.02	.132	

설문문항의 타당성 분석

해당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어떤 공통적인 요인들로 묶일 수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이라고 한다. 여러 문항들을 몇 개의 요인으로 묶어주어 내용을 단순화해주는데, 묶이는 요인끼리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MO(Kaiser-Meyer-Olkin) 측도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에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개 0.7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시민불복종 문항의 값은 0.6으로, 양호한 수준을 밑돌지만 어느 정도 높은 값을 보여주어 문항 간 상관관계에 다른 문항들이 설명하는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p)값이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8 시민불복종 문항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62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90.495
	자유도	15
	유의확률	.000

(p<0.05)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보편적으로 값이 0.4 미만이면 요인분석에서 제외한다. 우리 문항의 경우, 시민불복종 인식 1번 문항이 0.366으로 설명력이 보편적 값인 0.4보다 작긴 하지만 아주 크게 떨어지지 않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표 9 시민불복종 문항 공통성

	초기	추출
시민불복종 인식 1	1.000	.366
시민불복종 인식 2	1.000	.423
시민불복종 의지	1.000	.505
시민불복종 경험 1	1.000	.629
시민불복종 경험 2	1.000	.465
시민불복종 경험 3	1.000	.692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시민불복종 6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 및 요인분석 결과 충분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시민불복종 측정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과 의지 문항이 같은 요인으로 묶이고, 시민불복종 경험 문항 모두가 또 다른 요인으로 묶여있기는 하지만 2개의 요인으로 묶었을 경우 설명되는 총분산이 51.324%로 약간 작아, 묶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6개 문항 모두를 각각 다른 측정변수로 보고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2. 정부신뢰 문항 신뢰도 및 타당도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

정부신뢰에 대해서는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자료에서 총 9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1004개의 응답 중 795개가 유효하였으며, 표준화된 9개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는 0.822로, 신뢰

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0.6을 충분히 넘어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표 10 정부신뢰 문항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822	.822	9

표 11 정부신뢰 문항 기초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N
정부 청렴성	1.94	.652	795
정부 도덕성	1.71	.598	
정부 정직성	1.61	.591	
정부 공정성 1	2.18	.843	
정부 공정성 2	2.24	.806	
정부 공익성 1	2.09	.777	
정부 공익성 2	2.36	.834	
정부 공정성 3	1.94	.845	
정치인 신뢰도	1.98	.701	

설문문항의 타당성 분석

일반적으로 KMO가 0.7 이상이면 변수들의 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충분히 설명된다고 보는데 정부신뢰의 KMO 값이 0.848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부신뢰의 변수들간에 설명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신뢰 문항의 Bartlett 검정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훨씬 작게 나와 요인분석이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정부신뢰 문항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4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215.935
	자유도	36
	유의확률	.000

(p<0.05)

정부신뢰 문항의 공통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0.4 이하로 낮은 문항은 정치인 신뢰도이며, 공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인 신뢰도를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아직 제외시키지는 않고 다른 분석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표 13 정부신뢰 문항 공통성

	초기	추출
정부 청렴성	1.000	.614
정부 도덕성	1.000	.722
정부 정직성	1.000	.680
정부 공정성 1	1.000	.594
정부 공정성 2	1.000	.553
정부 공정성 3	1.000	.480
정부 공익성 1	1.000	.619
정부 공익성 2	1.000	.631
정치인 신뢰도	1.000	.267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정부신뢰 문항의 설명된 총분산은 2개의 요인으로 57.349%를 설명할 수 있다.

정부신뢰 문항의 회전된 성분행렬 값, 즉 베리믹스 값을 통해 본 결과, 정부 공익성 2개 문항과 정부 공정성 3개 문항이 1개 요인

으로, 정부 도덕성, 정직성, 청렴성, 정치인 신뢰도가 나머지 1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치인 신뢰도의 경우 높은 값은 아니므로 꼭 두 번째 요인에 필수로 들어가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 측정 문항들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는데, 공통성이 낮거나 베리믹스 성분행렬 값이 낮게 나온 일부 변수를 제외시키고 각각 요인분석 결과대로 시민불복종 요인 2개와 정부신뢰 요인 2개로 분류하여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를 연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변수들이 보통 1, 2개 문항으로 측정되어 처음부터 요인분석을 하기에는 문항수 자체가 너무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서 값이 적게 나온 요인들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을 통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탐색적 연구의 가능성이라고도 생각되어, 전체 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다. 즉, 모든 시민불복종 설문 문항 각각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보아 총 6개의 독립변수가 생성된다.

제3절 정부신뢰와 시민불복종의 관계

1.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1) 정부신뢰 값 합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인 정부신뢰가 4점 척도이기 때문에 정부신뢰 9개의 문항의 평균을 내어 변수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나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관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정부신뢰 문항 응답값을 모두 더한 값을 종속변수 값으로 지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부신뢰 9개의 문항 값을 모두 합한 값으로 정부신뢰 값을 내는 것이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음의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간의 상관관계 표를 보면 독립변수 중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1은 종속변수와 -0.183 ,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2은 종속변수와 -0.083 , 시민불복종 행동 의지는 종속변수와 -0.077 , 그리고 시민불복종 경험 2는 종속변수와 -0.090 의 값만큼의 상당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신뢰와 상관관계 값이 낮은 독립변수로는 시민불복종 경험 1(-0.006), 시민불복종 경험 3(-0.002)가 있다.

표 14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상관관계

		정부신뢰 문항값합	시민 불복종 필요성 인식 1	시민 불복종 필요성 인식 2	시민불 복종 의지	시민불 복종 경험 1	시민불 복종 경험 2	시민불 복종 경험 3
Pearson 상관	정부신뢰 문항값 합	1.000						
	시민 불복종 필요성 인식 1	-.183	1.000					
	시민 불복종 필요성 인식 2	-.083	.082	1.000				
	시민 불복종 의지	-.077	.143	.175	1.000			
	시민 불복종 경험 1	-.006	-.015	.015	.076	1.000		
	시민 불복종 경험 2	-.090	.055	.025	.179	.275	1.000	
	시민 불복종 경험 3	-.002	.025	.028	.141	.506	.367	1.000
유의 확률 (단측)	정부신뢰 문항값 합	.						
	시민 불복종 필요성 인식 1	.000	.					
	시민 불복종 필요성 인식 2	.007	.007	.				
	시민불복 종 의지	.011	.000	.000	.			
	시민 불복종 경험 1	.428	.330	.328	.012	.		
	시민 불복종 경험 2	.004	.050	.231	.000	.000	.	
	시민 불복종 경험 3	.473	.225	.206	.000	.000	.000	.

(p<0.05)

다음의 표에서는 R제곱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값이 0.056, 수정된 R제곱의 값도 0.045로 값이 높지는 않다. 그러나 GDP와 같은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닌 인식조사 데이터이고 척도 자체도 4점 척도이기 때문에 R제곱 값이 작긴 하지만 이후 회귀분석을 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1.358인 것으로 보아 오차항의 독립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15 정부신뢰(문항 값 합)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곱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F 변화량	
1	.237 _a	.056	.045	4.269	.056	5.197	10	871	.000	1.358

a. 예측자: (상수),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1, 2, 시민불복종 의지, 시민불복종 경험 여부 1, 2, 3
 b. 종속변수: 정부신뢰 문항 값 합

($p < 0.05$)

분산분석 결과, F 값이 5.197이고, 유의확률(p)이 0.05의 유의수준보다 작게 나와 해당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표 16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응답 값 합)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0.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	상한	공차	VIF
(상수)	19.723	2.246		8.783	.000	16.025	23.420		
성별	.028	.298	.003	.093	.926	-.464	.519	.929	1.077
나이	.035	.013	.115	2.732	.006	.014	.056	.615	1.627
학력	.106	.164	.030	.647	.518	-.164	.377	.503	1.986
소득	-.007	.064	-.004	-.114	.909	-.113	.098	.763	1.311
1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1	-.835	.172	-.163	-4.860	.000	-1.118	-.552	.965	1.036
1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2	-.141	.076	-.062	-1.851	.064	-.266	-.016	.964	1.037
1 시민불복종 의지	-.118	.174	-.024	-.677	.499	-.404	.168	.875	1.143
1 시민불복종 경험 1	.122	2.043	.002	.060	.952	-3.243	3.487	.733	1.365
1 시민불복종 경험 2	-1.540	.675	-.082	-2.282	.023	-2.650	-.429	.834	1.200
1 시민불복종 경험 3	1.164	1.308	.036	.890	.374	-.989	3.317	.679	1.474

a. 종속변수: 정부신뢰 문항 값 합, $p < 0.05$

위 표에서 5%의 유의수준에서의 유의확률을 보면 통제변수 중에서는 나이가 0.006, 독립변수 중에서는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1, 그리고 시민불복종 경험 2가 0.05보다 적게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음은 정부신뢰를 6개의 요인으로 보는데, 각 요인이 시민불복종 독립변수 6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부신뢰의 6개의 요인은 정부 청렴성, 정부 도

덕성, 정부 정직성, 정부 공정성, 정부 공익성, 정치인 신뢰도이다.

(2) 정부 청렴성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R은 0.179, R제곱은 0.032로 시민불복종이 정부 청렴성을 3.2% 설명하고 있어 설명력이 높지는 않다. 또한 유의수준 5% 에서 F 값은 2.634, 유의확률(p-value)은 0.004로 회귀계수가 0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독립변수인 시민불복종의 변동으로 인해 종속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동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길곤·김대중, 2015, p. 246)

표 17 정부청렴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곱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179 ^a	.032	.020	.647	1.839

a. 예측자: (상수), 소득, 시민불복종경험2, 시민불복종인식2, 성별, 시민불복종인식1, 시민불복종경험1, 시민불복종의지, 나이, 시민불복종경험3, 학력

b. 종속변수: 정부청렴성

정부청렴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시민불복종 인식 2와 시민불복종 의지, 2가지이며 통제변수 중에는 나이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표 18 시민불복종과 정부청렴성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	상한	공차	VIF
(상수)	2.218	.344		6.450	.000	1.543	2.893		
1 시민불복종 인식1	-.011	.027	-.015	-.413	.680	-.064	.042	.963	1.038
시민불복종 인식2	-.031	.012	-.091	-2.548	.011	-.054	-.007	.957	1.045
시민불복종 의지	-.068	.028	-.092	-2.454	.014	-.122	-.014	.866	1.155
시민불복종 경험1	.134	.310	.018	.432	.666	-.474	.742	.732	1.366
시민불복종 경험2	-.098	.108	-.035	-.908	.364	-.309	.114	.815	1.227
시민불복종 경험3	-.130	.199	-.028	-.654	.513	-.520	.260	.674	1.483
나이	.005	.002	.103	2.321	.021	.001	.009	.620	1.614
성별	-.015	.047	-.011	-.316	.752	-.107	.077	.933	1.072
학력	.033	.026	.063	1.285	.199	-.018	.084	.511	1.956
소득	-.007	.010	-.029	-.736	.462	-.027	.012	.770	1.299

a. 종속변수: 정부청렴성, $p < 0.05$

(3) 정부 도덕성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정부도덕성과 시민불복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R 값이 0.229, R 제곱 값이 0.052이고, 분산분석 결과 F값은 4.658,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확률은 이보다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어 시민불복종의 변동으로 인해 정부 도덕성이 유의미하게 변동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9 정부 도덕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곱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229 ^a	.052	.041	.590	1.873

a. 예측자: (상수), 소득, 시민불복종인식1, 시민불복종경험1, 시민불복종인식2, 성별, 시민불복종의지, 시민불복종경험2, 나이, 시민불복종경험3, 학력

b. 종속변수: 정부도덕성

특히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낮은 변수는 시민불복종 인식 2와 시민불복종의지, 시민불복종 경험 2, 그리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나이가 종속변수인 정부 도덕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20 시민불복종과 정부도덕성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	상한	공차	VIF	
1	(상수)	1.703	.312		5.459	.000	1.091	2.316		
	시민불복종 인식1	-.016	.024	-.023	-.674	.500	-.064	.031	.964	1.038
	시민불복종 인식2	-.024	.011	-.078	-2.272	.023	-.045	-.003	.962	1.039
	시민불복종의지	-.093	.025	-.136	-3.769	.000	-.141	-.045	.865	1.156
	시민불복종 경험1	.159	.282	.022	.562	.574	-.396	.713	.732	1.366
	시민불복종 경험2	-.205	.096	-.079	-2.142	.032	-.393	-.017	.823	1.215
	시민불복종 경험3	.240	.181	.054	1.325	.185	-.115	.595	.676	1.479
	나이	.006	.002	.132	3.088	.002	.002	.009	.618	1.618
	성별	-.031	.042	-.026	-.733	.464	-.113	.052	.928	1.077
	학력	.028	.023	.057	1.213	.225	-.017	.073	.503	1.986
	소득	9.507	.009	.000	.010	.992	-.018	.018	.767	1.304

a. 종속변수: 정부도덕성, $p < 0.05$

(4) 정부 정직성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R은 0.249, R제곱 값은 0.062로 시민불복종이 정부 정직성을 6.2% 설명하고, 분산분석 결과 F는 5.524, 유의확률은 유의수준 0.05 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표 21 정부정직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곱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249 ^a	.062	.051	.568	1.685

a. 예측자: (상수), 소득, 시민불복종경험2, 시민불복종인식2, 성별, 시민불복종인식1, 시민불복종경험1, 시민불복종의지, 나이, 시민불복종경험3, 학력

b. 종속변수: 정부정직성

유의확률이 낮은 값은 시민불복종인식 2, 시민불복종 의지, 시민불복종 경험 3, 그리고 통제변수에서는 나이, 학력이며, 이 변수들이 정부 정직성과 유의미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 시민불복종과 정부 정직성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하한	상한	공차	VIF	
1	(상수)	1.946	.300		6.477	.000	1.356	2.535		
	시민불복종인식1	-.038	.023	-.056	-1.634	.103	-.084	.008	.966	1.035
	시민불복종인식2	-.026	.010	-.085	-2.479	.013	-.046	-.005	.962	1.039
	시민불복종의지	-.083	.024	-.127	-3.527	.000	-.130	-.037	.871	1.148
	시민불복종경험1	.080	.272	.011	.293	.770	-.454	.613	.732	1.367
	시민불복종경험2	-.030	.095	-.012	-.320	.749	-.216	.155	.812	1.231
	시민불복종경험3	-.319	.175	-.075	-1.826	.068	-.661	.024	.674	1.483
	나이	.007	.002	.174	4.074	.000	.004	.011	.618	1.618
	성별	-.005	.040	-.004	-.115	.908	-.084	.075	.931	1.075
	학력	.049	.022	.104	2.208	.028	.005	.093	.506	1.975
소득	-.005	.009	-.023	-.591	.554	-.022	.012	.767	1.304	

a. 종속변수: 정부정직성, p<0.05

(5) 정부 공정성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R은 0.238, R제곱은 0.057로 시민불복종의 정부 공정성 설명력이 5.7%이다. F값은 5.211, 유의확률 0.05보다 극히 낮은 값을 보인다.

표 23 정부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곱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238 ^a	.057	.046	.66551	1.284

- a. 예측자: (상수), 소득, 시민불복종인식1, 시민불복종경험1, 시민불복종인식2, 성별, 시민불복종의지, 시민불복종경험2, 나이, 시민불복종경험3, 학력
 b. 종속변수: 정부공정성

아래 표를 확인한 결과 변수 중에서 시민불복종인식 1과 나이가 종속변수인 정부 공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4 시민불복종과 정부공정성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하한	상한	공차	VIF	
1	(상수)	2.303	.350		6.579	.000	1.616	2.990		
	시민불복종인식1	-.145	.027	-.181	-5.398	.000	-.197	-.092	.966	1.036
	시민불복종인식2	-.010	.012	-.027	-.811	.418	-.033	.014	.964	1.037
	시민불복종의지	.013	.027	.017	.481	.630	-.040	.066	.875	1.142
	시민불복종경험1	.139	.319	.017	.437	.662	-.486	.764	.733	1.365
	시민불복종경험2	-.190	.105	-.065	-1.803	.072	-.396	.017	.834	1.200
	시민불복종경험3	.076	.204	.015	.375	.708	-.324	.476	.679	1.474
	나이	.005	.002	.104	2.477	.013	.001	.009	.615	1.625
	성별	.049	.047	.036	1.044	.297	-.043	.140	.929	1.076
	학력	.005	.026	.009	.195	.845	-.045	.055	.504	1.983
	소득	-.007	.010	-.025	-.659	.510	-.026	.013	.763	1.310

- a. 종속변수: 정부공정성, p<0.05

(6) 정부 공익성과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R제곱 값이 0.053으로 시민불복종의 정부 공익성 설명력이 5.3% 이고, 유의수준 0.05에서 F 4.809, 유의확률은 0.05보다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25 정부공익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곱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229 ^a	.053	.042	.71426	1.412

a. 예측자: (상수), 소득, 시민불복종인식1, 시민불복종경험1, 시민불복종인식2, 성별, 시민불복종의지, 시민불복종경험2, 나이, 시민불복종경험3, 학력
 b. 종속변수: 정부공익성

다음 표에서 시민불복종 인식 1과 나이가 정부 공익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난다.

표 26 시민불복종과 정부공익성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 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	상한	공차	VIF	
1	(상수)	2.792	.376		7.425	.000	2.054	3.529		
	시민불복종 인식1	-.155	.029	-.181	-5.394	.000	-.212	-.099	.966	1.036
	시민불복종 인식2	-.010	.013	-.027	-.797	.425	-.035	.015	.963	1.038
	시민불복종 의지	-.009	.029	-.011	-.299	.765	-.066	.048	.875	1.143
	시민불복종 경험1	-.337	.342	-.038	-.985	.325	-1.008	.334	.733	1.365
	시민불복종 경험2	-.104	.113	-.033	-.922	.357	-.326	.117	.834	1.200
	시민불복종 경험3	.131	.219	.024	.599	.549	-.298	.560	.679	1.474
	나이	.005	.002	.089	2.101	.036	.000	.009	.615	1.626
	성별	.051	.050	.035	1.029	.304	-.047	.150	.929	1.076
	학력	.001	.027	.001	.018	.985	-.053	.054	.504	1.984
	소득	-.001	.011	-.003	-.087	.931	-.022	.020	.764	1.309

a. 종속변수: 정부공익성, $p < 0.05$

(7) 정치인 신뢰도와 시민불복종 관계 분석

R은 0.140, R제곱은 0.02으로 설명력은 2%이고, F는 1.720,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확률 0.072으로, 독립변수인 시민불복종과 종속변수인 정치인 신뢰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 27 정치인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 요약 및 R 제곱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140 ^a	.020	.008	.700	1.717

a. 예측자: (상수), 소득, 시민불복종인식1, 시민불복종경험1, 성별, 시민불복종인식2, 시민불복종의지, 시민불복종경험2, 나이, 시민불복종경험3, 학력

b. 종속변수: 정치인 신뢰도

그러나 독립변수 중에서 시민불복종 인식 1은 낮은 유의확률을 보여, 종속변수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8 시민불복종과 정치인 신뢰도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에 대한 95.0% 신뢰구간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하한	상한	공차	VIF	
1	(상수)	2.135	.369							
	시민불복종 인식1	-.070	.028	-.085	-2.479	.013	-.126	-.015	.964	1.037
	시민불복종 인식2	-.008	.013	-.023	-.675	.500	-.033	.016	.964	1.038
	시민불복종의지	.039	.029	.049	1.348	.178	-.018	.095	.874	1.145
	시민불복종 경험1	-.183	.335	-.021	-.545	.586	-.840	.475	.733	1.365
	시민불복종 경험2	-.177	.111	-.059	-1.600	.110	-.394	.040	.834	1.200
	시민불복종 경험3	.365	.214	.070	1.703	.089	-.056	.786	.679	1.474
	나이	-1.611	.002	.000	-.001	.999	-.004	.004	.613	1.630
	성별	.068	.049	.049	1.389	.165	-.028	.165	.930	1.076
	학력	-.031	.027	-.054	-1.144	.253	-.084	.022	.504	1.985
	소득	.003	.011	.013	.329	.742	-.017	.024	.761	1.315

a. 종속변수: 정치인신뢰도, p<0.05

2. 결과 요약

연구 계획은 시민불복종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필요성 인식,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 행동했던 경험으로 요인을 나누어 3개의 요인이 정부신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요인 분석 결과 각각 생각했던 요인 수보다도 적은 요인 2개씩으로 묶이기도 하였고, 2개 요인으로 설명할 때 설명력도 시민불복종은 51%, 정부신뢰는 57% 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두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인으로 묶지 않고 문항 각각을 다른 독립변수로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도 특별히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9개 문항 모두의 응답 값을 더한 값을 종속변수 값으로 변수를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평균으로 해도 비슷한 값을 도출하기는 하나, 설문 응답척도 자체가 4점 척도이기 때문에 응답값 하나씩 확인했을 때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작은 값들이 도출되어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응답 값의 합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6개 중 2개 변수만이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해당 독립변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가” 라는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문항 1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탄원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라는 시민불복종 경험 2번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더라도 질서유지가 꼭 필요하며 집회와 시위 금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일수록, 정부 주요 공직자가 부패하지 않았고, 정부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믿지 않으며, 정부 공직자는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감추지 않는 등 정부의 청렴, 도덕, 정직, 공정, 공익, 정치인 신뢰 값이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반대로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가 질서유지의 명목으로 금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일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시민불복종 경험 중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합법적인 시위, 비합법적인 시위는 유의미한 수준의 관련성은 없고 지난 1년 동안의 탄원서 서명 경험이 있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당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문항 2번 또한 0.064의 유의확률 값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0.05 기준에서는 독립변수와의 관계가 없다고 분석되지만, 유의수준이 0.1로 변경할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이다. 즉, 부당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통제 변수 중에 나이(age)변수의 유의확률이 0.006으로 상당히 높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번에는 통제변수로 사용되었으나 추후에 나이를 비롯한 다른 요인에 의해 시민불복종 의식이 설명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 결과 해석

제한적인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감 음(-)의 관계

본 연구는 장수찬(2002)의 1997년도 세계가치조사 데이터보다 약 13년 후인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은 대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 시민참여의 큰 범주 안에 속하는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가 정(+)이라는 범철학적 질적 연구를 따라 가설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양적 연구로도 증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시민인식 상에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에 대해서 정(+)의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10여 년 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본 결과로는 두 관계가 정(+)이라는 연구 가설이 모두 기각되었으며, 또한 변수 간 관계가 음(-)이라는 다수의 양적 연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해야 할 많은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특히 시민불복종을 인식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정책을 집행 및 수정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5장 결론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자료를 활용해서 시민불복종(6개 문항) 문항 각각을 독립변수로, 정부신뢰(9개 문항) 문항 응답값의 합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독립변수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문항 1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탄원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라는 시민불복종 경험 2번, 이렇게 총 독립변수 6개 중 2개가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부당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 문항 2번은 유의수준 5%에서 0.064의 유의확률 값을 나타내어 종속변수와의 유의미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유의수준을 10%로 확대할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로 해석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같은 유의수준 하에서 통제 변수 중에 나이 변수 유의확률이 0.006으로 정부신뢰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이를 근거로 세대별 시민불복종을 비롯한 시민의식이 많이 다를 것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 추후에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나이에 따라 시민불복종 인식과 행동이 다른 이유, 그리고 만약 생애주기적 의사결정 패턴이 아닌 특정 세대들의 특성이라면 그 특성은 어떤 원인요인들의 작용

으로 인한 것인지 연구해 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많은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철학적 개념을 행정학 연구에 도입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본 연구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시작된 시민불복종에 대한 개념을 대한민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회경제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법철학적 인식이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변수인지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행정 및 정책의 철학적 사고를 연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시민의 정부신뢰에 영향요인으로 시민불복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탐구했다는 점이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해야 할 많은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함의가 있다.

아직까지 정부의 강한 리더십으로 정책을 형성 및 집행해 온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시민인식에 기반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시민인식을 비롯한 행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올바른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정부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길곤(2014). **통계이론의 이해와 응용**. 경기: 문우사
- 고길곤·김대중 (2015). **SPSS를 이용한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경기: 문우사
- 이상돈. (2010). **기초 법학**. 경기: 법문사.
- 공유진. (2012). 롤즈의 시민불복종 개념에 대한 고찰: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정치적 행위. **철학논구**, 40, 99-112.
- 김대욱·이승중. (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43-62.
- 김혜정. (2010). 시민의 참여동기와 정치참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83-104.
- 박종민·배정현. (2011). 연구논문: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3.
-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35(5), 119-146.
-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 **한국정당학회보**, 12(2), 221-244.
- 원숙연. (2001). 신뢰의 개념적, 경험적 다차원성 신뢰연구에 갖는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10(3), 63-86.
- 이양수. (2008).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0(2), 533-553.
- 이윤수. (2013). 일반논문: 무사안일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

- 와 정책, 6(1), 29-47.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civic engagement), 사회자본(social capital), 그리고 정부신뢰(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정하영. (2006). 조직에서의 신뢰: 동아시아에서의 신뢰의 개념과 대인신뢰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4(1), 55-90.
- 주창범. (2010). 정책과정 시민참여 유형, 인지적 정당성 (Cognitive Legitimacy) 그리고 롱테일 정치 (Long Tail Politics).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4), 363-379.
- 지병근(2013).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인식. **국가전략**, 19(1), 31-56.
- 최태현. (2014). 참여가치인식과 정책이해도를 통한 시민참여 유형화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1), 231-256.
- 이승원. (2009). 시민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 Shin D. & Lee J. (2006). The Korea democracy barometer surveys: Unraveling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democratization, 1997-2004. *Korea Observer*, 37(2), 237-275.
- Korea Democracy Barometer. (2010). *2010 Korea barometer survey*. Retrieved from <http://www.koreabarometer.org/Database.htm>

<외국 문헌>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Chanley, V. A., Rudolph, T. J., & Rahn, W. M.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256.
- Hardin, R. (1998). Trust in Government. In V. Braithwaite & M. Levi (eds.),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 Hirschman, A.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 and 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Relation between the civil disobedience and government trust

-A focus on the Analysis of 2010 Korea
Democracy Barometer data-

Se-jin Ka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a large variety of citizen participation under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important that not only institutional participations, but also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s because it deserves to be called more great democracy that strive to promote the core principles of democracy when it is determined that democracy is being damaged even if it needs to break the current law and act.

I thought one who have high cognitive in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such as the civil obedience would trust government

more.

Reviewing previous studies, there were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civil disobedience(similar with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trust. Some were qualitative studies like Philosophy of Law, and others were quantitative studies using the citizenship cognitive survey data. In general, qualitative researches gave result which was the positive correlation, but quantitative researches gave different result which was the negative correlation. As seen different analysis results, there are gap between logical thinking and reality about democracy concepts in detail.

This research bases on the context of previous studies's positive correlation result, and uses word 'civil disobedience' instead of 'non-participation'.

This study establish a hypothesis that a well-recognized citizen will trust the government more. Using 2010 Korea Democracy Barometer survey dat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hypothesis was tested between civil disobedience and government trust.

As a analysis result, not only hypothesis is rejected and but also some variables have negative correlation.

Considering the positive relation through the philosophical and logical discussion I thought the citizens's understanding of democracy probably is higher than before, but not. The reason I guess is the recognition change need more than 10 years or it's

Korea citizen's tendency.

Even though the hypothesis is rejected between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ivil disobedience and government trust, this study has meaning as follows:

First, this study tried to unify and integrate the different terms to one word. Especially it is that to try to introduce a term of Philosophy Law into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ond, this study focused on the citizen's understanding on the democracy detail in the civil disobedience and citizen's government trust. It is possible to refer to this materials for predicting government trust or implementing public policy.

keywords : Civil disobedience,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Government trust, Representative democracy.

Student Number : 2012-21971